

제424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25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유지혜 외 58,5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4)
-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김재형 외 50,0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6)
-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진숙 외 54,39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1)
-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김현숙 외 50,95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9)
-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안서운 외 51,24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3)

2. 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유지혜 외 58,5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4)
 -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김재형 외 50,0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6)
 -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진숙 외 54,39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1)
 -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김현숙 외 50,95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9)
 -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안서운 외 51,24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3)
2. 현안질의 3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황태율 입법조사관입니다.

전영호 행정관입니다.

윤애심 주무관입니다.

하인숙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위원님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생각보다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웃음소리)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현안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유지혜 외 58,5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4)
-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김재형 외 50,0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6)
-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진숙 외 54,39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1)
-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김현숙 외 50,95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9)
-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안서운 외 51,24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3)

(10시35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9건의 청원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청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대식 소위원장님이시군요.

○김대식 위원 예,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청원 심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5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한 청원자료를 살펴보니깐요, 일단 청원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고요.

이 다섯 가지 심사 연장의 건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야 위원님들께서 정말 같이 공감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입니다.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또 지난 국정감사 때 상당히 큰 문제로 국회에서 지적했던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빠른 시간 내에,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김대식 위원** 두 분 간사님이 합의하면 제가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아니, 우리 합의 없이 그냥 하시면 돼요.

○**김대식 위원** 우리 교육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이 결정해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조정훈 간사님이랑 문정복 간사님, 특별히 이게 아주 쟁점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청원 해서 국민들의 요청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화답하는 그런 모범적인 국회 교육위원회가 되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질의

(10시38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2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냥 저도 인사말 없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시간들이 굉장히 바쁘시다 그래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질의하실 분은 김민전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교육부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화되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전 위원** 2학년부터 올해 5월부터 수강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의 준비들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현장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실제로 고교학점제

는 두 정부에 걸쳐서 꾸준히 준비해 온 정책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변화가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학교 현장에서의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이게 사교육 시장을 자극한다는 게 참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더라도 또 사교육 시장을 자극하게 되면 이것은 학부모와 또 사회 전체적으로 큰 짐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사교육 시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들떠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봤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제 어떤 변화든 공교육의 변화가 계속 사교육의 어떤 수요를 촉발한다 하는 그런 비판이 있고 실제로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경우에는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지금 사교육 시장은 잡아도 잡아도 오히려 더 커지는 게 사교육 시장이 아닌가 하는 비애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4세 고시반 7세 고시반,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옷을 수도 없는 정말 슬픈 단어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교육부와 또 교육청이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다라고 하는 걸 학부모님들께 정보를 잘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어려서 100m 단거리로 뛰고 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학습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학부모님과 정보를 잘 공유하시는 게 중국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사실 학부모정책과를 신설해 가지고 최근에 ‘학부모는 처음이라서’ 하는 홍보 자료도 제작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학부모님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교육청별로 계속 장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의 마인드가, 정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교육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알려 드리고 또 정말 바람직한 학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계속 현장과 소통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지난 3월 27일이었습니다. 소위 전교조의 비상시국선언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도 문제고 이 비상시국선언 자체도 문제가 아닌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울산교육청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서 에듀파인을 통해서 울산 전체 교직원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것 담당자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우리 장미란 국장이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부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울산교육청에서 교원이 내부망을 이용해서 그러한 사안이 있었고 감사원에서 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사실조사를 해 주고 징계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김민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나 또 전교조법 등에서도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유아무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앞에서 청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교육위원회 청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 친구 김정은’이라는 책에 대한 청원이 국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5만 명 이상이 이 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원이 있었고요.

저는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책을 학교에 비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치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좀 챙겨 봐야 되지 않겠는가 혹은 교육청에 챙겨 보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목이 내 친구 김정은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 중의 일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는 ‘김정일과 김정은은 달라요. 김정은은 서민을 해치지 않았어요. 권력층을 청산하면서 제도를 정립해요. 반면 김정일은 주민을 죽이면서 제도를 정립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정일은 사람을 죽였지만 김정은의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제도를 정립했다, 그것이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58페이지에서는 ‘김정은은 나라를 제대로 만들려는 게 보여요.’ 이 제대로라는 게 도 대체 뭘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책이 과연 학교에 비치되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20페이지 21페이지에서는 ‘방공호와 대피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더 죽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방공호와 대피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개선할 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학교에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공문이라도 보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학교 현장에 일어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국회전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이 청원 자체는 책의 출판 및 유통의 중단을 요구하는 그런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장관님 아까 인사하시면서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아서 인사드린다고 하셨는데 그간 열심히 잘해 주셨고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판단하실 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교육정책 혹은 아쉬웠던 교육정책 간단하게 국민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마 이제 마지막 상임위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어떤 때는 따끔하게 일침도 놓아 주시고 비판도 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교육위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책들은 어느 정책이나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특히 저출생 문제로 고민하던 부분에서 그래도 활로를 열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여러 정책 중에서도 좀 성과가 있는 정책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입시제도가 사실 올해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화되는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입시 개편에 대한 속도가 좀 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입시 개편 문제는 제가 세 번째 질의로 할 생각이구요.

혹시 정조 때 만든 자활전직이라고 하는 법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낙 정조 전문가시라서……

○**김준혁 위원** 정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김준혁 위원** 자활전직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버려진 고아들 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고아들, 그 고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10살 때까지. 그래서 갓난아이 때는 젖을 줄 수 있는 산모를 따로 쌀을 주고 젖을 주게 하고 또 지방 고을 수령들이 책임지고 길러야 된다, 그 이전까지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는 법이 정조시대 이전까지 없다가 정조가 처음 만든 법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가장 좋았던 성과가 늘봄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늘봄교육과 관련된 좋은 내용도 있고 또 지난번 대전의 하늘이 사건처럼 아쉬운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는 어떤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 장관님께서 어쨌든 현실 속에서, 6월 3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기를 하실 건데 그 뒤에 새로운 교육부장관이 오셔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아쉬운 대목 한두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교육부에서 제일 아쉬운 정책은 바로 의대 증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태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원 증원을 정했다는 식의 반응 같은 것들은 깜짝 놀랄 일이었지요. 어떻게 사회부총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강압적인 태도는 아니었겠으나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지 않은데 그런데 이번에 증원을 2000명에서 다시 늘리지 않는 2026년 의대 정원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최종 결정 전까지는 활발하게

부처 간에 토론해서……

○**김준혁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굉장히,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의대 증원을 다시 2024년 방식으로 환원한 것에 대해서 좋은 뉘앙스로 발언하지 않았던데 어떻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처 간에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하든 간에 상당 부분은 이견이 발생을 하는데요. 결국 정책적인 결론이 날 때는 이견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인 만큼 또 한 팀으로서 하게 됩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하나를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하면서 의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여기에 더해서 의대 관련된 여러 기반시설에 대한 보장 또 의대 교수들에 대한 확충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2025년 어쨌든 학생들도 복귀하고 또 기존 학생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가 퇴행이 돼요, 의료교육이. 관련해서 교육부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국립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의대 지원을 할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적하셨듯이 의대 교육 부분은 정말 교육부가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기로 삼아서 의대 교육의 질을 정말 크게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교육부에 의대교육지원국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의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돼 있고 물론 2026학년도 정원을 4학년 정원으로 환원하는 그런 불가피한 조치를 했습니다만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자 하는 각오를 교육부가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대 교육에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질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은 변함없이 갈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리는데 여기 박성민 기조실장님 이하 교육부 고위공직자분들께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관되게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이 내용보다 의대 교육 개혁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의료교육을 할 수 있게 일관되게 역할을 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100% 공감하고요.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주호 장관님 오늘 마지막 상임위 안 될 수도 있어요. 최대한 저는 한 번 더 상임위를 열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건 위원장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사실 저희가 교육 현안 특히 의대 문제도 한번, 여야 간사님께서 합의만 해 주신다면 우리가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상임위를 언제든지 열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이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경기도 포천시가평균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2026학년도 3058명으로 되돌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웠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직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조속히 학교로 돌아오셔서 의학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학교육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학생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이어 나가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김준혁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부와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의대정원을 동결한다고 해서 의대생들이 반드시 수업에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의대정원 동결이 자칫 다른 의료개혁 과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습니다. 현재 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 더욱 중요한 시기인데 장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부처 간의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소관하는 사항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협의해서 또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결정이 되면 원팀으로 일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온 국민이 그동안 불안해하셨던 만큼 부처 간의 소통 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장관님께서 마지막까지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저는 오늘 현안질의가 단순히 정부를 질타하거나 또 반대로 의료계와 의대생들을 비판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좀 미래지향적인 현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의사과학자 양성입니다. 제가 PPT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차유진 박사의 영상이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분이 공학도로 학부를 나오셨는데 의전원을 입학해서 의사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암들이 발생했고 거기서 무기력을 느껴서 다시 공학도가 되셔서 박사를 받으면서 의사과학자가 되신 분입니다. 2년 전에 카이스트 졸업할 때 대표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찰떡하게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대정원과 관련한 그간의 협상을 지켜 보면서 정부가 왜 의사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더 명확히 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는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부터 의과학자의 박사학위 취득까지 전주기 양성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출된 의과학자가 연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최대 11년간 단계별로 지원하는 글로벌 의과학자 양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약간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학을 입학할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의대정원과도 연결될 수 있을 만큼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과학자 양성에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의과학자 양성과 관련해서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향후 의과학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또 이 부분에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의과학자를 양성할지에 대해서는 그간에 상당히 이견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에 의대교육지원국이 설치된 만큼 의과학자 양성에 대해서도 부처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의대정원이 실패한 상황에서 의사 양성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전문대학원을 활용한 융합형 의과학자 사업을 통해서 기존 의대와 차별화할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학부에서는 과학하고 공학을 전공하고 의전원에 입학한 학생들이 융합형 의과학자 전문 과정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의전원에서 의과학자를 양성할 경우 학부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공학지식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말씀하신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일하게 차 의전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 의전원에서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 의전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또 정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전국에 아쉽게도 지금 의전원이 차 의과대학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활용해서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만 의과학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조금 전의 차유진 박사처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정부가 3058명을 제시했고 사실 학생들이 지금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7500명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더블링 생겨 가지고 굉장한 혼란을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시차를 뒤서 수업을 약

간 병행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산정책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사과학자도 오히려 조기에 양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7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왔을 때 조기에 신입생들을 의사과학자의 일부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으로 전환시키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자존심을 지켜 가면서 분산정책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너무 거기에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장관님이랑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필요하다면 학생들 중심으로 분산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학생들 7500명이 수업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 학생들의 의지에 의해서 분산시켜서 그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학생들의 의료 수준의 퀄리티를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 사실 제가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산정책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제안은 정말 교육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아직 학사 정상화 또 학생 복귀가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좀 해소가 되고 나면 그다음의 과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돌아온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질 좋은 교육을 담보하느냐 하는 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상력과 그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KMC 학장님들과 상당히 다양한 모델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안들 다 열어 놓고 저희들이 최대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안녕하세요.

윤석열은 국민과 헌법의 심판을 받아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교육감들께서는 탄핵 인용 환영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교육부장관께서도 환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탄핵에 대해서는, 계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엄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백승아 위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승리한 역사 또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에 기록될 정말 훌륭한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12·3 불법 계엄과 내란 그리고 대통령 탄핵의 교훈 중 하나는 올바른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잘해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보는데요.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 낸 건 깨어 있는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에게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또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운동, 국정농단 박근혜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대한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세 가지 정도로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12·3 계엄은 위헌·위법했다. 내란수괴의 주범 윤석열이었고 파면이 되었다. 또 내란에 가담한 공

범과 옹호 세력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역사에 기록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다시는 이런 불법 계엄과 내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거를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은 여러 시도교육청도 지금 여러 방안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시도교육청 사안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합의해서 학교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해서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백승아 위원 장관님, 교직원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 낙제점을 줬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교육부 최종 성적표입니다. 저는 이런 부정 평가의 원인이 소통 없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야말로 불통에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교육정책별 부정적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게 AI 디지털교과서와 늘봄학교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소통 없이 강행되었던 정책들입니다.

먼저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3~4월 전국 교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90.9%가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65.6%가 ‘안전사고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계속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올해 현장학습 실시한다는 응답은 45.7%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가 만들어질 때까지 전면 중단하거나 유보하겠다 이런 입장들이어서 갈등이 있는데요.

교원단체에서도 교육부에 대책 요구하고 있지만 대책은 좀 부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체험학습 안전대책 마련 위해 작년 11월에 법안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올해 3월 저희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현장학습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해당 법안 내용을 보다 현실화하고 구체화해야 하는 교육부에서는 아직 복지부동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전달 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한 학교현장의 요구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첫째는 면책에 해당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는 것. 둘째, 방대한 안전조치 책임을 교사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책임 분담 등으로 부담 완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을 마련하고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실한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침도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현장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포함해서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현장체험학습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입법도 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육부가 차근차근,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발 빠르게 대책을 수립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조례 제개정이라든가 또 법 개정이 일부 더 추가돼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빠르게 협력해서 정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저희랑 일정을 조율할 때 교육부가 빨리 응해 주지 않으셔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유보한 상태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빨리 하겠습니다. 압니다.

○백승아 위원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AI 교과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AI 디지털교과서 사용하려면 교육디지털원패스 이걸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3월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만 5200건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AI 디지털 사용을 위한 사이트 접속 및 가입 관련이었습니다. 4월 15일에는 완전히 먹통이 되어서 아예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률도 상당히 낮아요. 59.9%, 가입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한 반에 한 명의 학생이라도 AIDT 접속 불가능하면 수업이 어려워요. 서책형 교과서는 가져 오지 않으면 같이 보거나 옆 반에서 빌리면 되지만 AI 디지털교과서는 가입을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또 기기 활용해서 수업 진행해야 되는데 접속을 못 하면 그 학생은 완전히 수업에서 소외가 되겠지요.

또 이용률은 더 처참합니다. 지금 가입자 수 대비 이용률이 10% 미만이거든요. 세종 같은 곳은 하루에 중학교가 2명, 고등학교 4명 이렇게 사실상 아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랑 KERIS에서는 가입이 편하다, 사용이 쉽다, 문제없다고 홍보를 하셨는데 이게 교육현장을 잘 모르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AIDT 한 달에 수십억 원씩 구독료가 나가고 있는데 장관님, 가입을 조금 더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교육디지털원패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디지털원패스 같은 경우에는 개보위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를 해서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대폭 간소화했구요.

○백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사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혁신한 사례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 저는 이런 문제들이 강행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 수십억 원을 사교육업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결과가 나왔다, 학교에서는 스트레스와 혼란만 있고. 그래서 교과서 지위를 진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탈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가 못 됐는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AIDT 정책 철회하고 교과서 지위 여부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최대한 AIDT를 활용한 수업 혁신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원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장관님,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또 한 번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공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부처도 장관님들의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주호 장관님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고 또 칭찬도 받았지만 욕도 많이 얻어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공과를 놓고 보면 공이 참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평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이 비판과 또 격려를 한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한 정책들이 사실 아이들 미래만 보고 했습니다. 정파적인 거나 이념적인 것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도 좀 잘 이어 가도록 국회가 잘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박성민 기초실장님부터 교육부 관계자들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말 교육정책만큼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죽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대란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또 한 번 반추해 보고 어떤 점이 부족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어떤 백서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하나의 매뉴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 것들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이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그래서 향후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정책마다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앞으로 교육정책은 그런 흔들림 없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22일 날 의사협회를 방문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회장단 전체를 한번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소통을 하고 보니까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해결 방법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의사협회가 제시한 네 가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압니다.

○김대식 위원 그 네 가지 제안을 교육부에서는 다 알고 있겠지만 국민들이 한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네 가지를 한번 이야기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두 번째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재설계, 세 번째 의대생과 전공의의 학습권 및 수련권 보장,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한 입학정원 조정 등 현실적 대안 마련.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교육부에 관계돼 있는데 이것 충분하게 대화하면 풀 수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나요? 우리가 부족했나요 아니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동안에 불신의 벽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사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굉장히 뒤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정말 저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대화가 시작되면서 타협안도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협과 후속 대화가 시작이 되고 해서 저는 신뢰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고요. 그런 신뢰 회복이 저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회복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좀 더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그동안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어려웠던 그 문제들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신뢰 형성을 최대한 중시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제 현재 몇 % 정도 복귀가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시는 바와 같이 등록은 다 했고요, 등록은 다 했고 휴학도 다 철회가 됐고. 그렇지만 수업의 복귀가 지금 쉽지 않은데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돌아온 숫자의 증가는 아직 미미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한 14명의 의대생들과 처음 공식적인 대화를 했는데 상당히 희망적인 대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의대협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학생기구와 학생대표들과 대화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꼭 좀 4월 말 이전에 의대협 비롯한 학생 대표와 대화가 성사돼서 정말 다 복귀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김대식 위원 얼마 안 있으면 6월 3일 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 기간에 이게 마무리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벌써 대학에서 중간고사 기간이고 이번 달 지나고 나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 정부와 지금 대화해서 해결할 것들을 빨리하자, 다음 정부를 기다리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말 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빨리 좀 복귀하고 또 그다음 정부에서도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정부가 하면 되니까 일단 이 정부와 빨리 대화해서 복귀는 좀 완료하자, 학생들이 1년 이상 2년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지금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고요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들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우리가 앞으로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복귀 의사를 밝힌 이런 학생들에게 왕따라든지 집단 괴롭힘, 블랙리스트 이런 것이 횡행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 학교 당국이 대처는 하고 있는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말씀하신 도로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부가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해도 또 아주 오래된 굳어진 체제 내에서 여전히 좀 성행하는 부분을 100% 다 이렇게 보호를 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가장 좋은 방식은 어떻든 학생단체와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준 위원**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글로벌대학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현재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대학 관계자들이 많이 저한테 문의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23년도에 10개 대학을 선정했더군요. 그다음에 24년도에도 10개 대학을 선정하고 올해도 10개 대학을 선정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1개 대학에 5년간 해서 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태계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대학 선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관님 혁신이라는 게 뭔가요? 대학의 혁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대학이 지금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지역대학들은 특히 학생들 충원이 어렵고 또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첨단 분야를 비롯해서. 큰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대학들이 혁신하고, 지금 예를 들면 인구문제라든가 학생들이 줄어드는 문제라든가 또 지역의 생태계와 관련해서 산업과 같이 연계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혁신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교육부가 바라보는 혁신은 뭐냐? 글로벌대학이 바라보는 혁신이 뭐냐? 저는 당연히,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대학에게 주면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박성준 위원** 그런데 교육부 입장에서 혁신을 한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평가를 제대로 한나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10개 대학을 선정했어요. 그러면 계속 매년 지원만 하는 게 이 글로벌 사업의 취지에 맞느냐? 23년도 대학들을 보고 평가를 해서 24년도에 탈락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탈락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 100% 공감하고요. 사실 어저께 글로벌·RISE 위원회 지역 위원들까지 다 모인 워크숍에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준 위원** 아, 그러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핵심은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혁신을 우리가 잘 평가하고 정말 안 하는 대학은 좀 과감하게 페널티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글로벌 사업이라는 게 언뜻 보면 시혜적 사업 같은

데, 혁신과는 멀리 있는 시혜적 사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핵심을 잘 말씀하신 것 같고요.

○박성준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에서 오히려 이걸 너무 시혜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문제다, 과거에 교육부가 했던 여러 재정 지원 사업들이 돈을 들이면 그냥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해서 돈 다 하고 평가는 제대로 않고 계속 받기만 하는 것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돈 다 회수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3년도에 10개 대학 선정했으면 한 2년 정도 평가를 해 보고 그 대학이 맞는지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그 해에 또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연간 사업을 10개 10개 10개 하다 보니까 대학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 시혜적 사업 따오는 사업인데 우리가 못 받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가장 아쉬움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0개 대학 선정한다고 지금 하는데 원래는 5개 대학이었고 내년도에 다시 5개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올해는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20개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50%를 탈락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혁신이 되는 거고 지역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시혜적 사업으로 가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지금 장관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올해 중간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평가에 대해서 제가 교육부 담당자들한테는 정말 탈락시키는 대학이 나와야 된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평가를 엄하게 하자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데 2025년도면 올해 평가를 했어야지요. 평가 지금 아직 안 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저희가 1차 라운드가 사실은 연말에 시작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직 2년이……

○박성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장관님 맨날 백년지계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대 정원 문제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윤석열 정권에서 ‘2000명 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를 양산한 것 아니에요?

글로벌대학도 저는 취지가 너무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대학 인구 학령이 줄어들고 있고 또 지역의 산업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지요. 그런데 이 취지에 맞게 그 분야의 혁신이라고 하면 교육부 입장에서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맞는 것이지 단순히 일정에 맞춰서 그냥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는 100% 공감하고요.

○박성준 위원 그런 면에서는 25년도도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월

달에 이것 다 선정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비 선정을 하고요. 9월에 최종적으로 본선정이 됩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2년 동안 했다고 하면, 이게 윤석열 정권 5년 간다고 하면 5년의 교육사업으로서 교육개혁으로서 하나의 일환이었다고 하면 평가해 볼 만할 수가 있는데 이미 윤석열 정권 끝나고 조기 대선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정부에 이것도 여유를 갖고 넘겨주고 2년에 대한 평가를 올해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다음에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해 왔으니까 5월에 예비 선정하고 9월에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글로벌 사업의 근본적 취지와 오히려 동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예비 선정에 대한 계획이 이미 나왔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선정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이 정부 내에서 다 이렇게 한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 열어 놓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저는 올해는 한번 점검을 하고, 호흡 좀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짧아요. 다 그냥 1년마다 하고 5월에 하고 9월에 하고 하는데 제대로 된 평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교육부에서 글로벌대학에 대해서 재점검 이런 걸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께서 글로벌대학에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의원실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성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부총리님, 오늘 마지막 되면 진짜 서운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호 한 번 더 하세요.

(웃음소리)

○정성국 위원 제가 교총 회장 할 때 저하고는 수없이 만났지 않습니까.

부총리님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장관 하셨으니까, 교육부장관 한 게 합치면 몇 년 정도 되시지요? 한 5년 정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5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 5년 동안에 공적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몇 번 있으셨는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서이초 때, 하늘이……

○정성국 위원 그때가 유일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실은 저희가 MB 정부 때 대구에 안타까운 학교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마지막에, 어머님이 사실 교사셨습니다. 어머님의 강연장에서 제가 또 한 번 눈물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저는 그때 서이초 사건하고 사십구제 때지요? 그 선생님 때 부총리님

다음으로 제가 나가서 교원단체 대표로 이야기를 하다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성국 위원 부총리님이 울컥하시면서 우시니까 저도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때 부총리님하고 제가 했던 대화가 교권을 확립하고 학교를 정상화시키자고 했는데 또 최근에 양천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휴대전화로 여선생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일이 진짜 지극히 없는 일인데 그냥 참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사건도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서이초 이후에 그래도 국회랑 잘 협의해서 여러 입법도 하고 정책도 추진되는 과정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 국민들께 정말 더욱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더 사각지대는 없는지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최근에 또 언론 보도 보면 요즘 용산구의 학교에서 휴대폰으로 선생님의 특정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을 했어요. 정말 이게, 친구 간에 이런 일이 있어도 안 되는데 학생이 제자가 선생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학교 현장에 교권 확립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총리님,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 위원 교원지위법에 보면 교보위 있지 않습니까?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가해 학생을 출석 정지시키는 규정이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보위 심의 전에 출석 정지시키는 규정은 없고요. 그냥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에’ 이래 권장을 하고 있어요.

박성민 실장님, 맞지요? 권장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정성국 위원 그러면 교보위가 제때 열리지 않는 일들도 있는데 그런 일 생기면 7일 이내니까 7일 이내가 지나 버리면, 본인이 병가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님, 실장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계속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좀 더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 좀 잘 짚어 주십시오. 교보위 심의 전 7일 이내라 해 놓으니까, 부총리님 이것을 확실히 좀 짚어 주셔야 되겠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알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왜 선생님이 자기 병가를 내야 됩니까?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고

폭행당했는데 왜 자기가 자기 병가를 써야 됩니까? 짚어 주시고요.

최근에 또 아시지요?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에서 학교급식 관련 파업이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알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이게 계속 지금……

부총리님, 제가 교총회장 했을 때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하자고 정말 많이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하자는 거 저도 지금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부총리님 보시기에는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의 그 취지를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부총리님,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점심 맛있어서 오는 학생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편한, 웃긴 이야기로. 왜? 아침밥을 못 먹고 온 학생들이, 따뜻한 점심 있지 않습니까. 이 따뜻한 점심 이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교실 앞에 보면 게시판 같은 거에 급식 오늘 뭐 나오는지 못 본 거 확인하고 또 내일 뭐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게 정말 밥 먹는 게 애들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급식을 못 하게 되고 빵으로 주게 되고 이런 일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학교라는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사 한 끼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빵으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어떤든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이게 지금 교육위가 아니고 환노위가 그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지요, 노조에 대한 거니까요.

○정성국 위원 그러면 환노위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봤지요. 그렇지요?

공익사업의 범위를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충분히 일리가 있고 설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것 의원실과 협의해서 위원님 그 취지에 맞게 한번 또 의견을 어떻게 좀 좁힐 수 있는지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부총리님, 이거 좀 저희 의원실하고 한번 같이 움직여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그 근본 취지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좀 이 부분을,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임

기 끝나시기 전에 성과를 한번 좀 내주시면서 기쁜 소식을 학교에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동안 교육부총리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장관님께서 아까 계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똑같은 책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의대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장관님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교육 전문가라고, 심지어 교육부도 두 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이 상황을 다 예측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복지부가 불만을 제기해도 의대 정원을 그대로 다시 원상복귀시켰던 거겠지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의대 정원이라는 이 2000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엄청난 국민적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도미노 현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현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장관님은 책임 회피하고 있지요.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자료도 다 제대로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조금 전에도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의대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하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국민을 향해 기만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24년 내내 실종됐습니다. 출석률이 2%, 3%에 멈춰 있었어요. 그러면 의대 교육이 전면적으로 중단돼 있었습니다. 의대 교육에 있어서 무슨 질을 확보합니까? 거기다가 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위원들이 의대 정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건물도 지어 주겠다, 교수도 충원해 주겠다’ 이렇게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도 전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여전히 솔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립니다.

지금 건축하겠다고 하고 4조 원, 돈 많이 확보돼 있다고 하셨지만 제때 건축을 신축을 해야 되는 그 모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요?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을……

PPT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괄적으로 신축을 하겠다고 하면서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 달 전에 ‘심의가 잘 되고 있냐’ 이랬더니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2월 달에 이미 턴키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부결된 거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기획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렇게 중요한 건데 왜 장관님은 모르세요? 국립대 의대에서 모든 건축을 일괄해서 제출하고 일괄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국토부에서 심의가 안 된다

고 거부했어요. 그거를 모르고 계십니까? 왜 실장님한테 물어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좀 디테일한 사항이라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가 시설과도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만 답변해 주세요.

심의 탈락되셨지요? 턴키 방식으로 안 된다고 하셨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다시 보통 방식으로, 그냥 일괄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타도 통상적인 방식으로 예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안 하겠다고 하면서 턴키 방식으로 다시 심의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턴키 방식으로 재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일주일 안에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심의 결과의 내용에 따라 보면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새로운 공법이 없어서 그랬다는 게 주요 이유였거든요. 공기만 단축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공법으로 하겠다는 걸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일주일 안에 새로운 공법을 다시 넣는다는 것 자체도 코미디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기만적인 거지요. 애초에 건축 안에 무슨 그런 공법이 새로 도입이 되겠습니까, 그냥 건물을 신축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예타 면제를 받아 보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된 거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1년 이상 이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증원이 늘어나서—제가 너무 열받아 가지고—실제로 필요할 때는 건축이 아예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거기다가 이걸 국립대고요, 그래서 여덟 군데가 다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사립대도 재정 지원을 엄청 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마치 100% 다 될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계명대 같은 경우는 400억을 신청했는데 실제 배정된 금액은 34억에 불과하고요. 연세대도 1000억을 신청했는데 264억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장관님이 다 체크하고 계셨어야지요. 왜냐? 정원은 이미 1500명이 늘어나 있고 그러면 당장 필요한 것들이,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제때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질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것은 진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저는 교육부장관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의대 하나도 안 되고 전공의도 만몇백 명 중에 이백몇 명 나와 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본래의 수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단축돼서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런 기

록도 하나 남아 있지 않지요. 저는 이게 몇 년 동안이라도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는 여기 뒤에 계신 교육부 전문가·공무원들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2000명을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를 당연히 계속 건의했어야 하고 장관님은 더 건의했어야 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 2000명이 결정된 이후에 사실 배정된 인원의 50~100%로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것도 건의를 했고요.

○진선미 위원 됐습니다. 그거를 관철시키지 못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립대 교원 임용률도 엄청 낮습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립대들 임용이나……

○진선미 위원 사과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무슨 공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이주호 장관님, 저는 유아 사교육비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서 슬라이드 보시면서 즉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경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유아 사교육비 문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2017년도에는 시험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본조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지 않았고, 2017년도에는 시험조사를 했으나 미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질의할 때 이거 작년 2024년도에 5억 6000을 들어서 통계청하고 교육부가 같이 시험조사를 했으니 보고를 해 달라 공개를 해 달라 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조사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고 예산도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올해 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도 세우지 않으셨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 2024년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7·8·9월 3개월 동안에 사교육비 총액이 8154억 원입니다.

시간을 잘 보시지요. 1주에 아이들이 5.6시간을 사교육을 받고 참여율은 거의 50%에 가까운데 전체 연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3조 3000억 원이 든 겁니다.

장관님 이 수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유아 사교육비는 조속히 조사되어서 발표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했고요.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거 너무너무 창피한 보고서입니다. 2025년 OECD 보고서인데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입니다. 사교육비 지출을, 우리 한국의 사교육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고서인데요. ‘황금티켓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에 다 달려들어서 참여를 하는데 승리를 거머쥐는 학생들은 아주 소수만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지 모른다, 한국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OECD가 주목하고 있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아까 장관님께서 사교육에 대해서 이 3조 3000억 원 잘 살펴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AI 디지털 특교에 관심있는 것 전 국민들이 누구나 다 알 건데 교원들 연수하는 데만 해도 3293억 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경고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어요. 연합신문에 났는데, 강남 3구의 만 9세 이하의 아동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합니다. 사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아주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보고서들이 많은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시고 AI는 이렇게 추진하고 계셔서, 사실 100분의 1 정도라도 이 사교육비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올 수 있었을까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계속적으로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3조 3000억이 넘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간담회 딱 한 번 하셨던데요, AIDT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보를 보이셨느냐 하면 기자들과 함께 대구에 팸투어를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교원 차담회, 예비 교원 차담회도 하시고 실제로 광주와 서울도 가셨습니다. 이렇게 AIDT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도 본조사하는 비용도 빠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 번 정도 간담회한 게 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말씀하신 AIDT는 워낙 큰 변화라서 또 현장의 소통이 정말 필요해서 주력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저는 영유아의 사교육 문제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도대체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강경숙 위원 본조사도 하지 않으시고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제가 2월 달에 그걸 현안질의하니까 겨우 이제서야 보고하신 거잖아요. 그것 도대체 노력한 게 뭐 있으십니까? 한 번 정도 간담회하고, 여기 AIDT 하신 것 보세요. 팸투어까지 가시면서 기자들 끌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그러니 국민 1000명의 고발단을 만든 것입니다. 7세 고시를 하는 것이 아동학대라고 하면서 인권위에 제소를 했어요. 여기 아이 있습니다. 이 아동이 실제로 이거 인권위에 제소한 그 아동입니다. 학부모가 같이 나와 있고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보시면, 장관님 이렇게 연구를 하긴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경숙 위원 2023년도 하반기에 보니까 영유아 사교육 및 영어학원 부작용에 관한 정책연구를 하긴 하셨던데.

그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장관님 입장이 어떤지 제가 모르겠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자기주도성 떨어진다, 그리고 정서·심리적으로 비난·공격성·불안·좌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 상관관계가 나왔어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부모들이 보면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지낼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이는 것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교육비를 부담하다 보니 식비나 의류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기본 생활비까지 줄었습니다. 가처분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추적 60분’에 7세 고시에 대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새끼 학원까지 있어서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7세 고시반에 겨우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인데요. 그래서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이 이렇게 저연령화 되고 있고 강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것 보면 강도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나 시민사회가 요구하니까 그것도 보고하셨는데 영어 유아학원을 한번 보시면 144개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도 거치고 있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실태조사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영어 유아학원의 실태조사를 전체 유아 사교육과, 그 비용이 없다 하더라도 유아 대상의 영어 학원은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전수조사도 반드시 실시하고요.

○강경숙 위원 그래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또 위원님 의견을 주신 법적인 규제 마련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대책을 수립하려면 진단이 아주 명확해야겠습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조사하는 것은 아주 선행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교육정책 수립을 하는 데 너무 필수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례적 실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실과 잘 협의해서……

○강경숙 위원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예산 부분은 확인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아까 잠시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좀 낫설었습니다. 어쨌든 탄핵당한 정부의 장관이신데 우리가 너무 순하게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장관님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참 좋으신 분이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장관님으로서는 어찌됐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방어하지 못하셨던 책임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진선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지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무리하게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막지 못했다, 그러면 그 맡겨진 사업에 대해서 수습은 됐느냐? 수습도 안 됐습니다.

제가 AIDT 얘기하자면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서, 지금 현장에서는 혼란이 보통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늘봄 아까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학부모 단체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그분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 늘봄에 대한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엄마들이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기초학력 안전망 열심히 하겠다고 발언까지 했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그냥 폭삭 다 주저앉았어요.

착잡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급식 인력 관련된 겁니다. 아마 보고는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대전에 있는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이 중단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거기 계신 노동자들은 병가를 내면서 준법투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이런 것들이 불법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고민정 위원 본인들의 요구사항들을 죽 얘기했는데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건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고 내가 봤어요. 봤더니 튀김류를 주 2회 초과하지 않게 해 달라, 그리고 복잡한 데코레이션 이런 것 좀 안 하게 해 달라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정도는 그래도 학교가 좀 해 줄 수 있지 않나, 뭐 굳이 데코레이션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해산물 식재료 같은 것은 잘라져 있고 손질이 되어 있는 걸로 해 달라, 그다음에 당면이나 어묵같은 여러 가지 식재료들도 소분이 좀 된 걸로 달라, 양파나 계란 이런

것들도 이미 손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인 제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집에서보다 학교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우스갯소리를 부모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애가 기왕이면 신선한 달걀을 이제 막 깬 걸로 먹었으면 좋겠고, 양파든 오징어든 이것도 온전하게 싱싱하게 온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손질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엄마로서는 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분들이 과연 그만큼의 환경과 상황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가 4명 식사를 하루 차리는데요, 반찬 2개에다가 찌개든 국이든 뭐 하나 하면 제가 손이 좀 빠른 편인데도 아무리 빨리 해도 1시간입니다. 하고 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밥을 같이 못 먹어요. 결국은 애들하고 남편만 먼저 먹게 하고 저는 쉬었다가 먹곤 하거든요. 그런 정도인데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들을 하는가 해서 봤더니,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많이 고생들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식수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조리사 일인당 감당하고 있는 학생수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얼마쯤 되면 걱정할 거라고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뭐 20~30명……

○고민정 위원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회를 제가 살펴봤어요. 국회의원회관이 그래도 좀 여러 사람들이 먹는 곳이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회관이 조리사 일인당 식수인원이 84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청사 일인당 식수인원이 54명, 57명 이쯤 돼요. 이것도 장관님이 상상하신 것보다 훨씬 많기는 하지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럼 학교는 어떠냐?

그다음 거 보여 주세요.

경기도는 153명입니다. 서울은 137명이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계란도 다 까라, 양파도 다 까라, 오징어도 다 손질해라. 그게 가능해요? 저는 이 급식 조리사들께서 투쟁까지 하신다고 해서 얼마나 환경이 안 좋길래, 얼마나 임금 상황이 최악이길래 그런가, 그냥 통상적인 그런 투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이것을 들여다봤습니다. 봤더니 이 지경이에요. 이런 데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조리사로 안 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원 상태가 엄청나게 심각해서 서울·울산·제주는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미달률이 50%입니다. 조리사들이 더 이상은 학교급식 조리사로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혼자서 150명을 감당할 정도의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분들이 그만큼의 돈은 받냐?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이잖아요. 이걸 계산해 보면 월 209만 6270원이예요. 이걸 최저임금입니다. 그렇지요? 이 만큼을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급식 조리사들 1년 차 기본급을 봤더니 최저임금이 안 돼요. 206만

6000원으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임금은 국가에서 주라는 최저임금조차도 안 맞춰 주는데 일하는 양은 장관님 생각하시는 거보다 수배로 많은 정도로 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저도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장관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려고요. 도대체 조리사 일인당 가능한 식수인원이 몇 명인가? 국회는 80이고 정부청사는 50명인데 지금 학교는 150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적정한가를 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연구를 해 봐야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요청드리는데는 이 식수인원이 몇 명이 적정한가를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해 주십시오. 그것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뒷 분들도 다들 꼬덕꼬덕하시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좋은 제안입니다. 바로 연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성국 위원님께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과 잘 상의해서 또 고민정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부가 바로 연구도 착수하고 그 해법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세 분의 위원님들이 오전 질의를 기다리고 계신데 이 세 분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12시 반까지 질의를 마치고 2시 30분 무렵에 저희가 오후 질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고민정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토론회를 하다 왔거든요. 거기서 관련된 정보 중에 급식조리원이 그러니까 채용 자체가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유가 당연히 강도 높은 노동에 임금이 적으니까 그러겠지요. 그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방학 중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당연히 안 나오니까, 일을 안 하니까 무임금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방학 중에 월급 받잖아요.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거를 우선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학이니까, 학생들 없으니까 그 월급을 안 줘 버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잡으면 임금이 너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학교급식 문제 또 조리원분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 보고 또 아까 지적하셨듯이 교육부 내에서도 자체 연구도 좀 하고 또 의

원실과 협의해서 방안을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어쨌든 가장 비상식적인 것이 그것 같습니다. 방학 중에는 선생님들한테는 월급을 주고 이런 급식조리원들은 안 준다 이것부터 좀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 부분부터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월급을 안 받기 때문에 안 준다 이러면 또 그나마 조금 납득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방학 중에도 받고 자기들은 안 받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크고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것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가 3만 원 인상이 됐지요, 유치원. 25년에 3만 원, 85만 원에서 88만 원. 그런데 보육교사는 이게 인상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직까지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좀……

○**김문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같은 어린이집·유치원 똑같이 아이들 하는데 유치원 교사는 3만 원 올려 주고 어린이집은 안 올려 주니까 또 이것도 당장 눈에 띄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최대한 격차를 빨리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아주 상식에 너무 어긋나는 것들을 바로바로 좀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거는 언제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것도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대 관련해 가지고 24년도, 딱 1년 전이에요. 3월 20일 날 2시에 의료개혁 관련된,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복지부장관 이렇게 네 분이서 이 발표 중에 이것을 합니다,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 순천대·목포대 대학이 2개나 되니 한 군데로 대학 통합까지 해 가면서 의대를 배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전혀 안 지켜졌잖아요, 1년 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주호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여러 번 또 지적을 해 주시고 정부도 사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원 문제가 워낙 어렵게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전남의 그런 의대 신설 요구를 저희가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 결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자기들 살을 깎아 가면서

뼈를 깎아 가면서 대학 통합까지도 헌신으로 하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정말 다 따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에서는 내란·계엄을 하지 않나, 엉망으로 한 바람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좀 양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너무 큰 죄를 저질러 버린 사람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무기징역을 살아야 될 정도로 큰 죄를 저질러 버리니까 죄송하다고 한 순간 그 유죄 확정이 너무 커져 가지고 알면서도 일부러 안 하거든요.

이주호 장관님은 그 부분에 해당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시면 사과하셔도 되잖아요. 방금 이 부분에 관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수업 참여율이 너무 낮게 돼 있고 지금 4월 16일 기준 25%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은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분위기의 변화가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국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숫자로 보면 여전히 아직 큰 변화는 없어서……

○김문수 위원 아니, 그냥 단답형으로. 4월 16일 수업 참여율이 25.9%였거든요. 지금, 어제나 그제 정도 기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면 그 뒤로 진전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거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과 대화도 하면서 대화방에서 의견들이 기류가 바뀐다든지 또 학생들과 면담하고 있는 의대 학장님들의 의견들을 들어 보면 변화의 조짐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고 한번 계속 설득하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선고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공직선거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지침을 보낸 적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탄핵 선고에 대해서요?

○김문수 위원 예, 그때 선고 당시에 생중계할 때 선거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걸 보낸 적이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계기수업 말씀하시는 거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문수 위원 오히려 이런 거는 잘 시청하고 이렇게 내란을 저지르고 잘못 위헌·위법을 하면 큰일난다고 교육적으로 오히려 봐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시청하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앞서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시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공문을 보낸 거고요.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김문수 위원** 아무튼 교육이 거꾸로 잘못돼 가고 있다. 저게 별로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런 공문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했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교육부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생각은 많지만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국민의힘 간사로서 드립니다. 소회 같은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늘 현안질의니까 제가 꼭 좀 이어 가고 싶은 것이 이 입시비리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카르텔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조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조정훈 위원** 확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빠 조국 전 장관은 이 입시비리를 도왔다는 명목으로 의원직 박탈됐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조정훈 위원** 야당 위원님께서 양심 얘기를 하셨는데 진보정당 좌파정당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딸을 위해서는 못 할 짓이 없다, 이 또한 양심에 털이 났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한번 봐야겠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2018년부터 22년 문제인 정부 시절에 교원들과 사교육 업체 간의 소위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감사원에 적발돼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압니다.

○**조정훈 위원** 지금 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감사원에서 직접 징계를 한 경우도 있고요 또 교육부가 후속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철저히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 중에서 정말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를 하나 뽑으면 어떻게 보면 입시의 공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지금 신뢰도가 여론조사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입시의 신뢰도마저 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제도,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결과보고서를 제가 읽어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문제를 팔고 6억 원까지 되는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중간고사·기말고사에 그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가 있습니까?

이런 교사들 저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련된 교사의 숫자가 감사원에 의하면 한 250명 가까이 되고 그중의 20여 명은 바로 징계를 요구하셨고 나머지 한 220명은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교사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교육부가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그런 사교육 카르텔만은 철저히 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부가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요하고, 앞으로도 저는 교육위 상임위에 있는 한 이 문제는 6월 3일 조기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끝까지 추적할 예정인데요.

어제 교육부 관계자분들이 저희 의원실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할 때 제가 지시한 게 관련된 8개 시교육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북 이 교사들이 관계된 교육청에 언제까지 이 교사들의 징계를 마무리할지 보고 요청했습니다.

장관님,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2018~22년 5년간 그 감사 결과가 올해 1월에 나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제 한 3개월 흘렀습니다. 언제쯤 되면 이게 마무리될까요? 교육행정의 속도가 어느 정도 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혹시 이게 유야무야될까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교사가 자기 현직에서 내려가면, 그러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거는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 아마 그런……

○조정훈 위원 만약에 사직서 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입니다.

사직서를 내더라도 징계의결 요구를 지금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의결 요구된 교원들은 사직서 수리가 안 됩니다. 끝까지 징계부가금도 부과하고 철저히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245명에 대해서는 지금 스스로 멈출 수 없는 법적 조치가 완료된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난주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진행 경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번 주는 오늘로 끝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수취한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 이것 회수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징계부가금 심의 의결해서 회수하도록……

○조정훈 위원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상 부과할 수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조정훈 위원 이것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해야 하는 거예요? 의무조항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의무조항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섯 배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 전원 다 징계부가금 회수하길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비록 장관님은 6월 3일 이후에 안 계실 수 있어도 그 뒤에 직업공무원인 여러분들은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국회 상임위 교육위에 있는 한 계속 질의할 겁니다. 그리고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험을 어떻게 막느냐? 현직 교사들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뭐 NEIS에 등록된다 그러는데 제가 학원 원장이면 좋은 교사 불러서 학원 특강 하는데 NEIS에 등록 안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처벌조항도 미비하고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해요.

제가 여기서 다는 못 하지만 저는 이런 정말 불법을 저지른 교사가 249명뿐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교원에 대한 권익 보호는 우리가 꾸준히 해야겠지만 이런 일탈하는 교원들은 일벌백계해야지 오히려 교원에 대해서 권익 강화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접는다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국정감사 전까지 9개 시도교육청에서 얼마나 징계부가금을 했으며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정말 교육부가 책임지고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조정훈 간사님께서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얘기를 안 하셨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예전에 그래요 소 키우고 말 키우고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얘기 하면 안 된다,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한말씀 드리자면 똑같은 잣대로 본다라고 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특혜 취업한 걸로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고용노동부하고 감사원에서 감사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귀 당의 의원인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가 마약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훈 위원 그것은 입시 비리가 아니지요.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입시 비리와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이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MBC 뉴스를 보고 파주에 있는 한민고등학교를 진선미 위원님과 김준혁 위원님과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혹시 장관님 한민고등학교에 대한 보고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총체적인 난국이더라고요. 이 학교 설립의 근거는 들으셨을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국방부가 850억을 대고 당연히 공립학교로 가야 되는데 사립학교로 갔던 것들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사립학교로 갔다 하더라도 이사진이나 교직원들이 제대로 된 분들이 오셔서 학교를 잘 운영했어야 되는 게 맞지요?

이 학교가 보니까 개요가, 10년 정도 됐는데 저것 보시면 10년 동안에 밝혀진 성비위만 6건입니다, 6건. 밝혀진 성비위만. 1건만 일어나도 정말 난리가 나고 그럴 사항인데 이 학교는 밝혀진 것만 6개고요. 졸업생들 말을 들어 보니 이것 드러난 것은 새발의 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민고등학교가 일명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드 많이 가고 육군사관학교도 많이 가는, 뭐라 그러냐요 입시에서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학교더라고요. 그런 학교에서, 1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전수조사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장관님, 이해가 되시는 상황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도 보고를 받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정말 한 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 번 반복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엄하게 생각하고 있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철저하게 저희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파주교육청에서 2024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발견된 것만 23건이에요. 그런데 이 성비위 사건은 파주시교육청에서 빠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경기도가 전수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종합감사를 하라고 요청해서 지금 아마 감사가 들어간 모양인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렇게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문정복 위원 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날 현장에서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왔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세 분이 오셨는데 이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막 읍소도 하고 그러려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발언할 기회를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중에 학부모 대표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학교가 이런 일로 비난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학교가 이런 일로 지탄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이런 일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돼요’, ‘이런 일 때문’이라는 것은 성 피해를 받는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밖에 알려지는 것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오신 거예요.

제가요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엄마들은 이런 사건이 1건만 일어나도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전수조사해서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부모 대표님이 오서 가지고 이런 것 갖고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하여튼 참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런데 더 웃긴 것은요 저희가 떠나고 나서 학교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대책회의를 하셨대요. 대책회의를 하셨는데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만약에 문제로 삼게 되면 우리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저희가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항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정신인가요, 이게? 제정신인가요?

다시 봐 주세요.

지금 보시면요 드러난 건만 하면, 상대가 여학생뿐만이 아니에요. 이 기숙사의 사감은요, 상대가 남학생이고 이 기숙사의 사감은 남성이에요. 이게 여성과 남성 구분 없이 정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덮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략 70%가 군인 자녀들이 오시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문정복 위원 저는 이 군인 가족들의 사고방식이 다른 여타 학부모님들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벌인다 하더라도 교육부가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기숙형 학교에 대한, 특히 공교육이 많이 손이 가지 않는 사립형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이번 기회에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립학교는 공교육과 정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문정복 위원** 공교육에서는 그냥 징계를 하면 되는데 사립학교는 사안이 벌어지면 그 징계를 법원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냥 유야무야 한 달 그다음에 뭐 구두경고 이렇게 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 중에 파면된 선생님이 지금 어디 가서 일을 하시냐면 대치동 학원가에 가서 일하세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 학원가에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는요 이게 한민고등학교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기숙형 학교들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 추가질문 때는 이 학교가 얼마나 많은 비리투성인지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다음 시간에는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문정복 간사님 그 지적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지적을 보고 어떻게든 무엇보다도 경기도교육청과 바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하신 그 제안 포함해서 교육부도 고민하고 또 같이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고는 진짜 교육부도 그렇지만 교육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법과 제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교사·선생님이 성비위 문제로 파면당했을 경우에 학원가에서 일할 수가 있나요? 이 문제도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는 사실 규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교 교사가 성비위를 일으켰을 때 학원가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야 위원님들 함께 좀 입법 검토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 부분 교육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까 장관님께서 한 6월 3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니까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의 지속성이 되려면 국민적인 지지가 필수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 질의의 마지막이지만 AIDT 교과서는 최근에 백승아 위원님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교직원 10명 중에 8명, 77.7%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지난 연말 AIDT 도입 이전에 10만 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AIDT 도입 반대의견이 86.6%에 달합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인데요.

제가 이런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다가 최근에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이주호 장관께서 이명박 정부 때 교과서 자율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출판사들과 정부의 갈등을 야기한 바가 있더라고요.

2014년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 행정명령에 불복한 교과서 회사들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요? 그때 2019년도 대법원은 무려 2327억 원을 정부가 교과서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17개 교육청에서 N분의 1로 나누어서 부담하게 됐다는 겁니

다. 이명박 정부 때 장관님의 무리한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 때 소송이 진행됐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예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사태에서, 차후에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도 이런 사례가 벌어질까 저는 사실 두려워요.

장관님, 지금 초중교육법 개정안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반대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 야당에서 제1당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과서 지위를 박탈시키는 법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막아 보려고, 국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정부, 정권 교체가 됐어요. 우리 제1당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같은 법을 발의했어요. 거부가 안 되겠지요, 새로운 대통령한테는? 그래서 결국은 교과서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박탈했을 때 교과서 업체는 새로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략 소송 금액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세요? 혹시 전문가, 뒤의 관계자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혹시 숫자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위원장 김영호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면 어느 정도 소송이 제기될 것 같습니까, 금액이요?

○조정훈 위원 그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상이 되지요.

○조정훈 위원 질의도 아니고, 지금.

○위원장 김영호 질의예요.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략 한 어느 정도……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입니다.

올해……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서 이게 다시 입법화되면 결국은 교과서 업체가 소송 걸 것 아닙니까, 새로운 정부에? 그러면 그 피해 소송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돼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올해 기준으로 보통교부금으로 디지털교과서 구매를 위한 비용 예산 3100억 정도가 교육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최대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3100억?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역시 또 수천억의 손해배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장관님 새로운 정부에 이렇게 부담, 여든 야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렇게 부담을 주시면 안 되지요. 만약에 정말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정권 교체가 됐다 그러면 모든 교과서 업체에 민형사의 책임은 최상목 지금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 새로운 정부가 그 수천억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을 모든 법을 초월해서 저지한 지난 정부—그 당시가 되면 지난 정부가 되겠지요—최상목 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모든 민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고민하셔서 철회하세요. 정말 이런 사태 초래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드릴 텐데, 책임지실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그 답변 ‘예, 아니요’만 해 주시고 답변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마지막 안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어떻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고 정책들 중에서 갈등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중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좀 여야 간에도 갈등도 있었고 정부와도 갈등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야당의 입장들을 계속 수용을 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자율 선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전면실시가 아닌 1년간의 자율선택 기간 동안에 영향평가도 하고 해서 현장에 잘 안착시키겠다 하는 식으로 좀 수용을 한 거고요.

○위원장 김영호 거기까지만 했어야 돼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시범 실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지적을 저희가 많이 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업체들이 가격을 책정할 때도 오히려 교과서가 아닌 자료로 가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고요. 또 현장에서는 교과서가 아닌 경우에는 채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교육격차가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를 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1년간의 시간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걱정하시는 대로 정부가 바뀌는 상황에도 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장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제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장관님,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통계가 교사가 77.7……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그 통계는 정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위원장 김영호 왜 그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서 교과서 채택한 학교가 지금 몇 퍼센트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서울하고 대구나 또 경기도가 다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볼 때 대구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것도 제가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마는……

○조정훈 위원 대구가 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니, 경기도도 또 다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런데 저는 우리 간사님께 좀 문제 제기를 할게요. 간사님 말씀 중에, 제 원칙은 여야 위원님들의 발언에 저는 토를 안 달아요.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정훈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시지요, 질의를.

○위원장 김영호 저 지금 질의잖아요.

○조정훈 위원 7분 넘었어요. 지금 7분 넘었습니다. 제가 재고 있어요.

○고민정 위원 위원장한테 그러는 게 어딴. 한 번도 못 봤네.

○위원장 김영호 내가 진짜…… 조정훈 간사님! 제가 이렇게 좋게 말씀드릴 때 좀 오버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아픈가 봐요?

○조정훈 위원 아니, 제가 뭘……

○고민정 위원 그러면 간사님이 위원장 하시든가.

○조정훈 위원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기다리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조정훈 간사님 조선 시작될 때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아까 무슨 진보정당의 조국……

○조정훈 위원 그 얘기를 하시겠다고요?

○위원장 김영호 진짜 제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뿌리를 기억하고 정치를 하십시오, 제발!

○조정훈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장관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민형사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정부가 지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국민들도 공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정훈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김민전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지요.

○김민전 위원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저희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라고 시작하시면서 대답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고교학점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부총리님도 동의하신다 이런 뜻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제가 답변할 때 2개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한 사안이라서 준비를 잘했으면 해서……

○김민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가 상당히, 올해 5월부터 준비를, 이미 과목 설계를 해야 된다는 진로 지도교사의 숫자도 적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고교학점제는 과거의 입학사정관제의 입시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입학사정관제를 하는 학교도 거의 없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조금 동떨어진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입학사정관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시 체제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입학사정관분들이 자료나 활동 같은 걸 잘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나 입학사정관제의 가장 큰 유사점은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위 한 줄 세우기식이 아니고 각각 아이들의 개성과 특성을 잘 평가해서 입시에 반영한다는 차원입니다.

○김민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너무 많은 교사들의 업무 강도와 더불어서 또 학부모들의 불안감 또 학생들의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 저는 깊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들 잘 듣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게 갈 길이요 말씀드렸듯이 2개 정부에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냥 쪽 준비를 해 온 상황이라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교육통계연보를 보게 되면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9시간 이하도 굉장히 많고요. 현장에서 물어보면 0시간 수업인 분들도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들을, 물론 수석교사나 보직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주당 28시간 이상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나 물어봤더니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좀 마음 약하신 분들에게 더 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게 합리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대답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교사들의 봉급체계도 대학처럼 일정 시수를 정하고 그 시수 이상 받을 때 성과급으로 더 드리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체계를 바꾸든지 아니면 일정 시간 이하에 대해서는 좀 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체계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워낙 저희가 학문 융합의 시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크게 바뀌고 있는 시대라서 이제 교사분들의 인사제도의 경우에도 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제도부터 해서 양성체계까지 시작해서 전반적으

로 큰 변화가 요구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격하게 바뀔 경우에 또 현장과 괴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차근차근 잘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필요한 준비들을 교육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과 상관없이 교육부는 정말 백년대계라고 하는 입장에서 교육 현안들을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에서도 의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국립대와 사립의대의 지원 차이가 너무 크다 이게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앞에서는 다른 얘기도 있었습니까마는 사립의대에 대해서도 지원이 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 교육부의 입장은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의료인력 양성의 공공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학생들에 대한 휴학 불허라든가 이런 조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립대 공립대 막론하고 사실은 공공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립에 대한 국가 보조를 늘리는 부분도 계속 저희들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과거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의대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립의대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송구한 이야기지만 장관님께서도 어쨌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간의 역할을 내려놓으셔야 되지만 그러나 기초실장님 이하 나머지 공직자분들은 계속해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에 대한 질문보다 남아 계시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실 공직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문정복 위원님하고 같이 한민고등학교 갔을 때 한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소리를 많이 지르시는지, 진선미 위원님하고 저하고 문정복 간사님하고 셋이 갔는데 정말 앓아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안하무인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때 느꼈던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셋이 왔는데도 교장이 이런 정도 태도면 이거는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자치도 교육자치지만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한민고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립대학들도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교육부에다가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해도 사립대학이라는 이유로 많은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사회 문제라든가 아니면 비리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거나 감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본 대학이 협성대학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국감 때 정을호 위원님께서 협성대학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사항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감사 중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사회와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의원실에서 감사관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감사관실에서 정관이 좀 모호하다라는 식으로 회피성의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질의를 우리 보좌관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제가 하는 이유는 그 뒤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희 보좌관이 ‘변호사 자문을 좀 받아 보면 정확하지 않느냐?’, 우리도 관련해서 자문을 정확하게 3명의 변호사한테 보면서 그 정관의 모호성이 아니라 정관의 정확성을 다 찾아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약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되겠지만 아직도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교육부가 혹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좀 더 제대로 된 감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역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한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세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파주교육지원청에서 했던 감사 내용들이 본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충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본질성이 좀 떨어지고 외피만 감사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내용도 있었고 지금도 또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 지적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교육부는 과연 이 사립대학 사립학교, 물론 역할을 열심히 하는 아주 긍정적인 학교들도 존재하고 부정적인 학교도 있지만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것들 혹은 좋은 정책들 혹은 법안들을 제안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위원들 전체가 교육의 좋은 목표 좋은 방향 또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그 지적하신 감사 부분은 저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사립대학에 자유를 얼마나 주느냐 안 주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감사, 특히 비리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자는 것은 조정훈 위원께서도 사학비리·카르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는 앞으로도 교육부의 굉장히 더욱 강화될 기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 관계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의 그 지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 마지막쯤에 제가 조정훈 간사님이랑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언쟁 중에 조정훈 간사님께 불편한 표현을 제가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자꾸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셨다 그러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는 잘 지내야지요. 다음 새로운 정부가 오면 역시 우리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기 때문에 행정부에는 조금 우리가 긴장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여야 이 틀 사이 속에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들끼리는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자존심은 안 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문수 위원 자꾸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렇습시다마는 그래도 아무튼 서로 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문수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하다 중단된 것 다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탄핵심판 생중계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선거법이라든가 교육의 중립성, 교육기본법에 위반될 소지,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가급적 그런 것 보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교육 쪽으로 오히려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이게 이주호 장관 계실 때 2012년도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가지고 보면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장학지도를 못 하도록 뺐어요, 그것 보면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이주호 장관님 때 이것 개정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제가 교육감에게 대폭 교육에 대한 권한을 이양을 했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탄핵심판 생중계를 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이 법에 어떻게 보면 위반되는 것 같은 느낌도 됐고 또 방법도 오히려 반대로 비교육적으로 됐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육부장관이 이런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 이런 것 때문에 한 거고요.

아무튼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문수 위원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이 잘돼야 된다, 교육기본법에도 보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란,

비상계엄, 위법, 계엄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민주시민교육이 오히려 안 돼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닌가.

그래서 학교에서 이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아니냐 다를까 민주시민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2021년까지 42억이었는데 22년부터 34억으로 줄더니 그다음에 35억으로 잠깐 늘었다가 그다음에 10억으로 떨어지고 25년도에는 6억 배정해 놔어요. 그리고 국고에는 아예 없애 버렸고 특교로만 주고. 그러니까 정권의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만 봐도 민주주의보다는 독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을 스스로 예산을 통해서도 보여 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말씀하신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또 민주시민을 잘 양성해서 국가의 민주주의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도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예산이 삭감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도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사안은 사실 지방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국고·특교 사업으로 하던 것들이 상당 부분 지방교부금으로 이양이 돼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복잡한 얘기보다는 수치상으로 다 나와 있고 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결코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민주시민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심지어는 육군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초등의대반, 7세 고시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학원들이 있나, ‘현황 없음’ 또는 ‘0곳’ ‘0곳’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조사,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학원이 등록 신고할 때에 이것을 쓰도록 해 놔야 의대반 있는지 파악하기가 좋은데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제가 알기로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 자동 등록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 지적하신 것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규제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4세 대상으로 하는 수업 중에 영어라든가 이런 과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몇 세 대상으로 하는지만 표기하게 해도 이게 4세 고시반이겠구나, 7세 고시반이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학원 등록할 때 아예 그런 칸을 넣어 가지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까 강경숙 위원님 지적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것 엄중한 케이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새겨들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APEC 교육장관회의가 곧 있지요, 5월 달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거기 교육위원장 정도라도 초청을 좀 하시지 전혀 없던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초청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문수 위원 아니, 이게 좀 그만큼……

○조정훈 위원 대선 뛰어야지, 어디 가.

○김문수 위원 아니, 너무 이런 큰 행사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혹시 저희가 놓쳤으면, 아마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요.

○김문수 위원 아니요.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 그렇습니까?

○김문수 위원 제가 서류 다 봤더니 자기들끼리 하고 있더라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면 안 되지요.

○김문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반드시 교육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초청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게 어쨌든 정권·권력·정부가 의회나 국민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아닌지가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주한 것 아닙니다.

(웃음소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저희가 혹시 빠졌으면……

○위원장 김영호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의외로 모르고 계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장께서 오셔야지 자리가 빛나지요.

○위원장 김영호 아유, 아닙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꼭 초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한민고 얘기 더 해 볼게요.

현직 교장이 신병철이신데 이분이 지금 파주경찰서에 횡령·배임으로다가 고발이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인즉슨 실제로 이분이 학교의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우리가 그날 가니까 여섯 번밖에 사용 안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 그 차의 블랙박스과 CCTV가 썩 지워졌어요. 그런데 여섯 번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다른 차의 CCTV를 보고 확인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 이 차를 얼마나 운행을 했는지 그 근거 자료가 지워졌기 때문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단 한 번을 사용해도 공용 차량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한민고등학교의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그날 이사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홍두승이라는 분이신데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이고 아마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용역에 관계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 제가 보니까 바지예요. 허수아비입니다. 그리고 실제 권력은 누가 휘두르냐면 전 이사장 사위인 이재봉 상임이사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결재하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봉 상임이사 회식 자리에 여교사들을 쭉 앞에 앉혀 놓고 같이 회식하고 그랬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의 가장 큰 교장의 문제는 뭐냐면 학교의 문제는 뭐냐면, 학교 교직원들을 뽑잖아요. 그런데 학교 교직원을 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내려보내지만 실제로 여기는 법인이 뽑거든요. 법인이 뽑는데, 배점 자체를 면접을 50점 주니까 실제로 서류나 이런 점수가 당연히 높아도 면접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7명 공개 모집을 했는데 실제로는 찍어 놓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이재봉 상임이사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분의 사위가 행정실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대단히 많은 횡령과 보조금을 횡령하고 부당 수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밝혀졌으면 면직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지요.

○문정복 위원 면직시키지 말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문정복 위원 면직을 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군 관련 재단에 사무국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 정말 이 학원 자체가, 이 한민고등학교 자체가 엄청난 비리의 온상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군 부서관 출신 전우회 간부가 급식업체를 운영합니다. 급식업체를 운영하는데, 한민고등학교가 연간 한 40억 정도의 급식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11년 동안 계약을 한 거예요. 입찰이 단 1건뿐이 안 들어와요, 이 사람밖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면, 우리가 그런 것 있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될 급식비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67%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고, 실제로 부식비를 어떻게 썼는지도 잘 모르고 계속 감사도 잘 안 해요. 그런데다가 이 교장이 이분이 운영하는 공군호텔의 뷔페에 가서 자녀 결혼식을 하며, 떼떽하게 얘기해요. 거기 가서 결혼식 했다고 떼떽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사들 회의를 다 그 호텔에 가서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계속 내고요.

이런 데를, 단 한 번도 감사 조치를 하지 않은 이 법인을 저는 그냥 둘 수 없는 거고요, 당장이라도 관선 이사 파견하고. 이 학교, 국가 예산으로 지은 돈이고요 우리 교육부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학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관선 이사 파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시 공립화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말씀 주신, 이게 지금 사립으로 돼 있는데 사실 교육부의 입장은 자율형 공립, 사실은 비슷합니다. 자율형 공립도 자율을 많이 주고 있지만 어떻게 공립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국방부하고 협의가 아직까지 좀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받았고요. 그래서 차제에 공립화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각 의원실로다가 전화하시는 학부모님들께 경고합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위를 생각해야지 학교의 이미지 실추가 문제입니까? 만약에 내 아이를 어떤 선생님이 손 붙잡고 허벅지 만지고 그랬다라고 하면 용납하시겠어요? 제발 의원실에 그런 항의 전화하시는 어머니들, 그런 몰상식한 어머니들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을 1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1분 더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발언하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마무리할 때 위원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언쟁이 있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앞으로도 의정활동할 때 단어와 의정활동에 대해서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가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된 것도 위원장님의 역할이 크셨다고 생각하고요. 특정 발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말씀을 먼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조정훈 위원** 당은 다르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은 지켜 나가는 게 맞다고 믿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공감합니다.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장관님.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국가장학금인데요. 학점은행제도에 대해서 제가 학점은행을 아직 경험은 안 해 봤기 때문에, 학점은행제가 99년에 도입된 이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학위를 취득한 숫자만도 벌써 110만 명이 넘고 저는 교육의 선택권 그리고 또 고등교육의 혜택을 적시에 받지 못한 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한 제도 자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다니고 있는데 왜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느냐라는 문의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해 봤더니 장학재단법의 개정으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에 다니는 학생도 학자금 지원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객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학자금 대출은 되는데 장학금 지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부에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학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고등교육의 기회를 성인 이후에 받으려는 분들이 이 학점은행제를 다녔을 때 왜 국가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백번 양보해서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분들이 학점은행을 다닐 때는 꼭 좀 주자라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로 난색이 있는 것처럼 반응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정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국가장학금제도가 처음 10년 전에 출발할 때만 해도 한 2조가 총규모로 모자랐는데 지금 거의 5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등록금 규모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서 그야말로 등록금 반값 부담을 실현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가장학제도가 굉장히 빠르게 확충이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장학금은 재학생들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짧게 해 주시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적하신 대로 학점은행제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아직 없는데요. 국가장학금제도가 이제 상당히 그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지적하신 학점은행제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 부분 소외계층도 있고 또 지원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할 단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조정훈 위원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다만 그동안 학점은행제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비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그래서 국고를 여기에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데에 대한 또 다른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학점은행제 자체도 계속 국회에서도 지적하셨지만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서 이런.....

○조정훈 위원 학점은행제 개선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정권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새 정권이 어느 정당이 되든지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대로 대학 가는 학생들만을 위한 정책은 이제는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거의 다 제도화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대학 가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만큼 대학 안 가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을까, 대학 안 가는 청년들은 대학 가는 학생들에게 주는 그 많은 장학금을 보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 질문에 우리 진짜 답해야 됩니다.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선에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대학 가는 친구들 장학금을 주는 게 과연 정의이고 옳을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면 학점은행·평생교육과 같은 분들에게 지원을 넓히는 건 이건 정의로운 것이기도 하고 평등한 것이기도 하고 자유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1분 더 써도 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더, 이건 쉬운 건데요.

제가 최근에 지역을 다니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중고등학교 앞에 전자담배 자판기들이 마구마구 생기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전자담배 자판기가 생기는 게 이게 가능한가? 이것도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안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게 뭐냐, 전자담배 파는 거고 무인이다 보니까 엄마·아빠 신분증 살짝 해서 찍으면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게 법적으로 공간이 뭐라 그럴까 허점이 있더라고요. 전자담배가 유흥시설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전자담배가 담배라는, 담배법이라는 게 있나 보지요? 거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약간 배 찜라 이거예요, 업소들이. 그런데 이것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말씀하신 대로 담배사업법상에 전자담배가 지금 담배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생긴 건데요.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건강에는 바로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장관님이 저희 지역 오신다고 한번 제안 주셔서 가지고 저는 솔직히 전자담배 판매소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 이것 정말 법이 없더라도 성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꼭 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행정명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마 담배사업법 개정이 제일 바람직하겠습시다만 그와 함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조정훈 위원 그런데 법 개정에 지금 두세 달이잖아요, 앞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 법률 개정 포함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장관님, 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 현황과 관련돼서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오전에 진선미 위원께서 사립대 재정 지원 부족에 대한 말씀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결국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로 동결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2000명을 증원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원 동결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의대생들은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더블링뿐만 아니라 트리플링을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장관님, 이런 부분 의대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너무 안타깝습시다만 하여튼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사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1년간 장관님께 몇 번이나 이런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 말씀

이 좀 달라진 것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아니라 좀 단호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의대 사태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면에서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여건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에 22개 사립의대가 있습니다. 그중의 절반, 11개 사립의대 중에서 용자 지금 현황을 보니까 그중에 정부에 용자 신청을 한 대학 11개 중에서 9개가 용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받은 것은 2개 학교뿐이고 그리고 그 대학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신청액 대비 지급액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립의대의 용자 지급 현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도로 사립대 의대 여건 개선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실 수요를 100% 반영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 신청에서 수요보다 훨씬 많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적어도 교육부의 입장은 사립의대에 대해서도 지원을 대폭 늘려 보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획보다는 더 많이 신청을 해서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이 달성된 거라고 해석하시나 본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획이 원래는 용자도 제대로 하게 하고 교원도 임용을 하고 건물도 제대로 짓겠다, 교사도…… 제대로 건축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제 교원 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동안에 1000명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립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교원 총수가 늘어난 대학이 6개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개 대학은 한 자릿수에 그쳤는데요.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2배가 넘게 늘었는데 교원 총수를 보면 오히려 1명이 더 줄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증가를 한 것 같은데도 비전임 교원이 전임교원으로 옮겨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강원대는 6명이고요 경북대 1명, 제주대 4명, 충북대는 오히려 감소했는데 순증한 것으로 보면 이렇게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비전임이 전임으로 갔을 뿐 새로운 교수를 확보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그 경우에 사실은 기금교수가 비전임교수들인데 그분들이 갔는데요, 아마 거기에 새로운 기금교수들을 충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리를 옮긴 게 아니고 비전임교원도 계속 확보 중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무튼 학생들로서는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이 좀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신속하게 증원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더블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립대 같은 경우에도 채용 현황을 보면 1학기에는 50%, 2학기에는 40%밖에 되지 않아요.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절반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셨는지 그리고 스스로 의대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세우셨는데 그걸 점검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늘리고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계속 대학과 체크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사실 아까 오전에 진선미 위원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셨는데 사실 저도 되게 화가 나거든요. 진짜 이렇게밖에 의대 교육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다고, 3058로 간다고 했는데도 애들은 또 돌아오지도 않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의료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새로운 대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다행인 것은 의대 학장님 들하고 충분히 교감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된 것인데요. 어이없는 사고가 3월 22일 날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나면, 한국어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재외동포하고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을 평가할 때 보는 시험인데요. 3월 22일 날 6회 IBT, 이것은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Internet Based Test)이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테스트에 말하기 평가도 있었는데 3시간 반 동안이나 멈춰 버린 거예요, 시험을 보는 중에. 그래서 국내에서는 4월까지, 국외에서는 5월까지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진단하는 중이기는 한데 어떻게 도대체 IT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장관님이 처음 보고받으신 것은 3월 22일 날 문제가 있었는데 27일 날 받으셨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경숙 위원 해당 사항을 너무 교육부에서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시스템을 담당했던 모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유의 사건을 낸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토픽(TOPIK) 디지털 전환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것 정말 너무나,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고 나기 전에 아마 선정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도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강경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된 이후에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재조정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선정하고 보니까 업체가 문제가 있었으니 최종 체결하실 때 확실하게 들여다봐 주시고요. 본 위원에게 문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장관님, 아까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악순환의 도미노 효과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고민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의 하나가 사교육을 또 자극했다는 거지요.

4세 고시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장관님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진선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그 질문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4살 아이들이 영어학원을 가기 위해서 받는 질문입니다. ‘지구에서 물이 없어진다면?’ ‘백만장자가 된다면 뭘 할래?’ 이런 질문을 받는 아이들이, 그대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나고요.

앞에서 위원님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사교육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상임위 현안질의를 위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최근 5년간 9세 이하 아이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런 걸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현황을 저희가 받아 봤는데 좀 많이 놀랍더라고요. 일단 2020년부터 몇 년이 지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서울로만 범위를 좁혀 보면, 물론 이것이 단순화해서 모든 복잡한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의 특히 강남 3구, 강남 서초·송파 지역의 유아를 상대로 한 영어학원의 비중이 엄청 높아요. 가장 높은데, 유독 이 세 군데에만 건강보험 청구의 증가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3배 이상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인이 다양하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4살짜리 아이한테, 아까의 그 질문을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다, 재미로 놀이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라는 생각이요. 결국은 부모들이 내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는 너무 당연한 부분이지요. 교육열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아이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교육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2023년 12월에 이미 교육부에서 용역을 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혹시 장관님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제가 사실은 특별히 좀 부락을 해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진선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부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

장히 공부,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회성 발달을 방해하고 스트레스 유발하고 정서 발달이 늦어지고 두뇌 발달을 저해하고 이런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부모들이 이런 결정을 내 아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려진다면 이런 걸 왜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돈 들여가며.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대정원이 확대된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도 의대를 갈 수 있겠네’, 그러면 의대 가려고 했던 애들은 더 좋은 의대를 가려고 하고 또 과학기술대나 이런 데 가려고 했던 애들은 다시 의대로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밑에까지 그런 영향이 다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실제로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걸 오전에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언제까지 임기가 계속될지 모르나 그래도 이번에 정원에 대한 뭔가를, 협상의 여지를 열기 위해서 정원을 동결시켰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득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응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발로 찾아 다니시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몇 개월 동안 제일 먼저 뭘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지금 정부에서 뭔가를 풀 수 있는 빌미를 만들 수 있다면 거기에 올인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예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전에 10명의 의대 학생도 만났고 또 의대협하고도 지금 대화 제안을 해 놓고 있고요. 어떤든 최대한 이 문제를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라도 좀 풀어놓고 가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1분 더 쓰십시오.

○진선미 위원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셨다고 저도 믿고 싶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대정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의료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지역에 너무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또 공공의료에도 뭔가 공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메꾸고 정돈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고민했던 이 내용이 이렇게 부당하게 마무리되면서 심지어는 정원이 동결되면서까지 오히려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린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겼다’ 또 어떻게 보면 의대분들이나 의대 관련된 분들이 ‘아, 이렇게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원상회복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신 건 아닌가 진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말 무거운 마음이고요. 그렇지만 또 희망적인 부분은 지금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학생이 돌아오도록 또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사교육 말씀 주신 것도 저희가 용역이 끝났고 그 바탕으로 해서 정말 좀 과감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어도 방안은 마련해 놓고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추가질의 또 있으니까요.

진선미 위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진선미 위원님이 지금 보여 주신 그 통계 자료, 0~9세까지 우울증 현상이 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전라남도 장성군 성산초등학교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학교가 118년의 전통이 있는 학교더라고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수도권 아이들이랑 정말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학부모님들한테 ‘사교육 받으시냐?’고 했더니 사교육 받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는 글로컬 어학센터라는, 아이들을 위한 원주민 교사 선생님이 있는데 다 게임으로 어학을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교감 선생님께 한번 교육청 간의 교류, 그러니까 수도권의 학생들은 한 일주일 10여 일 정도를 그렇게 비수도권의 환경 좋은 곳에 가서 좀 체험학습해 보고 또 이렇게 좀 번잡하지 않았던 우리 비수도권의 학생들도 수도권의 이 번잡한 환경 속에서도 한번 수업을 받아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비수도권의 학업 수업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교류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교육부에서 그런 교류 사업은 아직 하는 게 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전남 같은 데 정말……

○위원장 김영호 이게 전남 영남 다 있을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도시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특히 폐교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면 그런 게 상당히 효과를 본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영호 한번 꼭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도권·비수도권 학생들이 교류하면서 굉장히 서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감하고 추가질의인데요.

김민전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혹시 또 하실 분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하시고, 3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시지요? 그러면 김민전 위원님으로 시작해서 아까 그 순서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진짜 마지막 발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동의되는 원칙이자 또 교육의 방법론은 바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고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논쟁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떤 정답을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두고 학생들이 논쟁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것을 주된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3월 27일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보고도 분노한 것 중의 하나가 정치인들 같으면 ‘내란 수괴’ 이런 단어를 써도 저는 선전 선동이니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요 교사들이 이런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동의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분노스러웠기 때문입니다. 3월 27일은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나오기 이전이고요. 그 당시에 많은 헌법학자들 가운데에는 계엄이 내란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헌법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 반대 방면에서는 또 계엄이 내란이다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다양한 주장들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어느 것이 답인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막 바로 내란 수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 3월 27일은 탄핵심판이 나오기도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렇게 선전 선동의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정신과는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라라고 하는 지적을 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바로 4세 고시 6세 고시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너무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의존한다 이런 주장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633제라고 하는 게 저희가 다닐 때에도 633제였고요. 그 이전의 유치원은 거의 가지 않던 시대에도 633제였다고 한다면 이제 유치원은 4세반 7세반 이런 거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지금 다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육 편제를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유치원 1년 정도는 의무교육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한 5년 정도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교육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 결혼도 늦어지고 직장을 갖는 것도 늦어지고 다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감안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오늘 김민전 위원님의 질의가 이주호 장관님 재임 시절의 마지막 질의가 안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장 김영호 한 번 더 상임위를 열어야지요.

○조정훈 위원 그것 말고.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질의 전에 처음부터 1분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다른 분은 1분

더 주셨는데 저는 1분을 못 써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아까 못 쓰셨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장관님, 장관님은 예비고사 본고사 시절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김준혁 위원 저는 학력고사 시절이고 요즘은 수능 학생들 아닙니까. 장관님, 예비고사·본고사는 일본식 제도였고 요즘 수능은 미국 SAT를 차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SAT 1년에 몇 번 보는지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여러 번 봅니다.

○김준혁 위원 일곱 번 보는데, 우리도 원래 예전에 그 방식을 차용해서 두 번 봤다가 난이도 조절 실패하는 바람에 망가졌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장관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에 이번 수능과 관련된 개혁을 제대로 못 하신 게 제일 아쉽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 이상은 좀 봐야 된다, 난이도 관련해서 잘 조절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 1994년에 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이유로 그때 수학·과학과 관련해서 문과·이과 통합 시험 본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준혁 위원 그때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김준혁 위원 장관님한테 여쭙보는 것보다 차라리 기조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가……

○김준혁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때 이과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려고 하다가 아주 그냥 언론의 질타를 맞아 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없애 버리고 문과·이과 다시 나뉘어서 수학·과학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낼까요? 제가 2028년 수능 관련된 예시 조항을 봤는데 이걸 다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통합형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이 상태로 가게 되면 94년도의 재판이 될 수 있다. 문과 이과생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과학을 더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교육부가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의 관련해서는 구체성을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쨌든 큰 거시적인 틀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부 공직자분들하고 함께 우리가 또 논의해야 될 여러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건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도를 갖고 추진하는 건 당연히 맞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수해서 내 스스로 구렁텅이로 빠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정책 추진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생각이 꼭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잖아요. 94년에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 버렸거든요.

지금 대학교육 수능교육 입시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일종의 너무 깊은 생각 혹은 책무 이런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통합형 인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전인교육의 또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오히려 실수할 수 있다.

역으로 과학 분야나 수학 분야를 더 집중해서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지금 말하는 AI 인재 육성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아까 김용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의과학자로도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잘못 시행할 수 있다고 하니 이 관련해서는 장관님이나 기조실장님,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 김영호 예,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게 2028 수능인데요. 사실 2022 교육 과정의 개편에 따라서 2028 수능 체제가 바뀌었는데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이 된 게 2022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많은 과목들, 특히 사회나 과학 과목에서 선택과목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선택과목이 다 수능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공통사회 공통과학으로 해서 융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또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수학이 미적분Ⅱ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과가 유리하다 하는 것은 미적분Ⅱ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만 논란 시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는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준혁 위원 장관님, 아닙니다. 94년도에도 이랬습니다, 우리가 다 조사했어요. 정말입니다.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되게 이상적인 것 같은데 나중에 장관님은 떠나셔도 여기 계신 국장님들 중에 수능 담당하시는 분은 옷 벗을지 모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우리 그 팀이 바로 의원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저희가 어떤 문제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 듣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꼭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아까 APEC 교육장관회의 일단 잘 하시기를 바라고 교육위원장님도 꼭 초대 좀 하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 또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아마 좀 자랑을 하시려고 내놓으신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학교 내에서, 저도 교장선생님들 다 만나고 특히 대구 쪽의 교장선생님들을 많이 만나 봤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계신 교장선생님들도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막상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준비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이 조금 불안하고 문제가 많다고, 오히려 조금 축소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류가 많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APEC에서 자랑으로 내놓아 버리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주제를 이걸로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걱정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시다시피 APEC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를 여러 나라 지도자들 또 정부에서는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그 주제가 아무래도 그동안 교육부가 국제행사를 하면 가장 그래도 글로벌하게 주목을 받는 부분이 디지털 교육입니다.

○**김문수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잘 되고 누가 봐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소개할 만한 때는 괜찮은데 지금 아직 너무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여기 누구 선생님들 오서 가지고 손 들고 ‘저것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난리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문제점도 보여 드리고 그러면……

○**김문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도 나왔듯이 이게 보통 공직사회에서 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냐면 공무원들이나 단체장들이 너무 의욕을 가지고 아직 정책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어떤 사기업체들하고 ‘좋은 거니까, 우리가 무조건 밀어줄 테니까 미리 준비해라’ 이래 가지고 그 말만 믿고 실제로 막 올인해서 사업비를 완전히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책임 못 지고, 단체장이 바뀌거나 대통령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집행 못 하게 돼서 책임 못 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AIDT가 약간 그런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출판사들이 소송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사실은 기존에 문제가 터졌던 그런 일들이 지금 AIDT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교육시설 안전은, 이사장을 최근에 임명했잖아요. 저희들이 제발 좀 가급적이면 알박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학교 안전 전문성

이 전혀 없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 한 것, 대통령실 비서관 한 것, 또 여당 국민의힘 구미 시장 예비후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보기에 소위 친윤 정치인인데 이런 사람을 이사장으로 임명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특히 6월 3일까지 이런 주요 인사들 자리 비어 가지고 새로 자리 생긴 것 제가 자료 요청해 놓았는데 꼭 제출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안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사회에서 모집공고를 내서 심사하고 의결한 것을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을 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문수 위원 당연히 승인했으니까 임명이 됐을 텐데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알박기식으로, 더군다나 정권 교체 시기에 이렇게 무리하게 했냐 이 말입니다. 또 그럴 가능성들이 6월 3일까지 계속 발생할 것이 걱정돼 가지고, 교육감님 인품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은 AIDT 토론회가 있나, APEC에 왜 저를 보내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미션을 주시는 것 같아서.

(웃음소리)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다고 하면 일단 영유아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도 이 조사 전에는 그냥 쉽게 영어유치원 이렇게 막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유치원을 쓸 수가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법이 명확하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용역 한번 하고 버리거나 그냥 보고서로 남기고 끝날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널리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는 명의로 광고하는 것 있는지 확인해서, 실제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 제재하는 것 정확하게 의사 전달하셔서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후 조치 상황 이것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부서 내에서, 이것은 정말 꼭 문제 제기를 교육부가 세게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직접적인 규제도 해야 된다. 사실은 학원 규제가 상당 부분 교육청에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관심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교

육부가 직접 챙기자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 서면질의로 들어갈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교육부가 교육청에 충분히 협조 공문 이런 것을 조율하라는 역할이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를 좀 총정리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하면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지금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아니, 조율을 잘하셔야지요. 그게 효과가 있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것 하셔야 이럴 때 힘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동안의 관행이 사실은 학원에 대한 규제가 너무,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보면서……

○**진선미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보고서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는 100% 공감하고 사실은 제가 그 용역을 빨리 줘서 어떻게든 결과를 보자고 한 사람입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지시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런 것 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이번에 싱크홀이 난 게 우리 동네예요, 강일·명일동. 그런데 그 옆이 좋은 학군이라고 얘기하는 한영외고 한영중 한영고 이런 4개의 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스를 차단시키는 바람에 급식이 아예 안되고 여러 가지 이동에도 불편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갖고 계시잖아요, 학교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싱크홀을 별도로 독립해서 고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독립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침 위원님……

○**진선미 위원** 마무리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1분만 더……

○**위원장 김영호** 마무리인데 마지막 찬스 한 번 드릴게요, 1분.

○**진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훈련 매뉴얼을 살펴봤더니 이 안에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교통 유형이나 유사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랑 또 다르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다릅니다.

○**진선미 위원**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해 봤더니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매뉴얼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학교중앙회에 물어보니까 발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어긋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매뉴얼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저도 의대 증원 문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문정복 위원 저 아직 안 했는데요.

○위원장 김영호 아직 안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네요.

문정복 간사님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장관님, 추경이 5월 1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거라고 보고받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교육부한테 뭐라 할 것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지난 번에 영유아 0~2세 보육료하고 장애인 보육료하고 영아반 인센티브해서 동결됐었잖아요. 2025년도 예산이 2년 연속 동결됐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가 1656억 원을 추경안에 반영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런데 기재부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문정복 위원 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예산 당국과 협의하다 보면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소요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교육위에서 해 주시면 반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문정복 위원 실제로 저희가요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 물가상승률하고 임금인상분을 정리해서 한 4%, 적게는 5% 이렇게 매년 상승분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는 그렇게 해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는 2년 연속 동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 국산을 먹일 수는 없지만 지금 환율이 뛰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나 기타 운영비가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육료가 물가상승분에 맞춰서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가중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사실 어린이집으로부터 그런 많은 고충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국회에 사실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사실은 올해 5월 1일 날 추경안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6월 3일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바로 추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지만 장관님 안 계시더라도 여기 실국장님들 다 계시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교육부가 다음 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만이, 기재부한테 얘기해서 반드시 받아 주셔야만이 되는 거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요.

또 이번에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하면서 목적예비비에서 만 5세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2600억 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문정복 위원 만 5세 무상교육비 2600억 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준비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경을 하지 않으면서 이 목적예비비로 2600억 원을 배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통합이라는 것은 보통 어느 기관에 상관없이 아동들의 동등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이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김문수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2600억 원의 무상 교육비를 목적예비비로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집의 보육료 인상분 1656억하고 그다음에 목적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2600억을 다음번 추경에서는 반드시 교육부가 선으로 우선으로 배정을 하고 이것들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또 교육부가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또 국회에서도 계속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민전 위원님, 더 시간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안 하셔도 되겠어요?

○김민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의대 교육 정상화되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의대생들 비공개로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를 저희가 논의하기 전에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하여튼 의대 2000명 증원하는 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했다 그리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보인 태도가 좀 강압적이었다 이런 불만들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교육부와 대학이 학생들에게 좀 강압적인 방법으로 복학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오늘은 이것 좀 공유하고, 장관님께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장 김영호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례는 전북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전권을 갖고 의과대학에만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학칙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도를 알아요. 아는데, 학교 학칙 같은 경우는 사실 전 학교 전 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의대 학생들에게만 적용하니까 학생들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림대학교의 경우는 학교가 의대생들을 반드시 중징계할 거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꼭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고려대학교 부분이에요. 고려대에서는 좁은 방에서 5분에서 10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두고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제적시킬 거라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학생들 휴대폰을 압수해서 녹음 조작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복학 원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면 자퇴로 간주한다는 통보까지 했는데 아니, 저희가 절실하고 이것을 꼭 관철하고 더 이상 의대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말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핸드폰을 압수까지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것은 폭력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까지 동원하면 의대 증원의 혼란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지금 장관님도 의대생들 최근에 한 번 만났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장 김영호 진짜 너무 늦게 만나신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 한 100번을 만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너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 만날 걸 열 번 만나고 열 번 만날 걸 스무 번 만나서 정말 진심으로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장관님께서도 대화, 소통을 한 번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다만 학생들을 한 번 만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이것에 변명하지 마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장 김영호 저는 진짜 이 문제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어른들이 학생들을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굴복시키면 안 된다, 민주적인 방향에서 적극성을 갖고 소통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들어오지만 우리가 커리큘럼이나 잘 해서 시차와 또 달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분산해서 지금의 그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는 데, 정부 관료들은 그래도 좀 경직됐으니까 학생 너희들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너희들이 들어왔을 때 이 7500명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분산하면 더 유익하고 즐겁고 퀄리티가 유지되는 교육 방향이 되겠나라는 그런 좀 열린 자세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강압적인 자세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했고요.

장관님, 말씀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말 진작에 이렇게 대화의 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큼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계속 잘 안됐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며칠 전에 10명을 만났을 때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구나, 정말 학생들이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구나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100번이라도 만나겠다, 지금 한 달 얼마 남

왔지만 내가 정말 여기 올인해서 당신들 다 만나줄 테니까, 또 만나고 나서는 ‘상당히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이건 사실 공개될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희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진작에 이게 참 잘 됐으면 좋았는데 대화가 성사가 안 된 부분은 그동안에 의정의 벽이 너무 높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미숙했던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몇 번이라도 더 만나서 저희가 오해를 풀고 호소를 드리게 되면 또 다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도 학생들한테 만약에 수업에 복귀했을 때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어떻게 좀 분산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야 되는지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똑같은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그것도 좀 학생들 만나면 의견을 많이 청취해 보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말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저는 이 문제 무조건, 정말 학생들이 집중력과 어떤 지혜만 발휘한다 그러면 저는 학생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좀 나이브한 생각이지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학생들을 접촉하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 역시도 학생들 만나서 계속 좀 좋게 설득하고 해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장님이 계속 좋은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서면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문정복 간사님, 김문수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어요.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몇 번 언급하지만 교육부장관님도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는 것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성국 조정훈 진선미

○청가 위원(2인)

서지영 정을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주호
차관보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소은주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직무대리 예혜란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대변인 구연희
감사관 김도환
사회정책협력관 정병익
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정책기획관 배동인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영유아지원관 박대림